

특별기고

민주주의·헌법가치 수호 위해 신속한 탄핵 인용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바로 세우야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인구절벽, 기후 위기, 남북관계 악화, 경제와 민생의 불안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의 대전환도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했듯이, 대한민국의 대전환도 헌법을 바로 세우 민주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독일 헌법의 공식 이름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인 것도 나치 정권의 헌법 질서 파괴를 극복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헌법의 가치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적은 독재이며, 우리 헌법의 적은 늘 비상계엄이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헌법의 역사는 비상계엄을 통한 민주주의 억압의 반복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사실은 역사적 평가로 명백히 남아 있다.

우리 현대사를 보자면 비상계엄을 찬성하고 옹호하는 국민은 독재를 기웠고,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국민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왔다.

우리 사회의 기본법인 헌법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교육의 책임이자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독재와 비상계엄을 통한 헌법 질서 파괴를 극복하고 방지하려는 의지를 담아내야만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이다.

전남교육청은 민주주의 교육의 중심에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 확산해 나갈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 수호' 교육자료를 개발해 신학기를 맞아 3월 5일 각급 학교에 보급했고, 현장의 교원들과 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 및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해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를지기 'K-민주주의'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전남의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그 전체 조건이다.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비상계엄을 헌법의 질서로 되돌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과 우리 헌법질서는 12.3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국민은 극소수이다.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즉시 해제된 것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고 명령이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만 국론이 장기간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의 당사자가 한 명이니 이를 분리할 수 없음을 명백하다.

따라서 빠르고 분명한 판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기고

광주 장애예술인의 고용지원제도·일자리 필요성

문필동

첨단중합사회복지관장



모든 인간은 일에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일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리고 현대인에게 직업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 중요하다. 이것은 장애예술인을 비롯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적용된다.

장애예술인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예술인에게 진정한 근로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을 제공해 장애예술인 고용 기반 이념인 정상화에 의한 고용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예술인 일자리 정책은 장애예술인의 노동권 확보를 통한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함께 자립의 기반을 제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예술인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장애예술인 자신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존적인 생활에서 탈피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자존심을 고취 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애예술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통과를 지금까지 줄곧 미흡하다고 평가받았던 체계적인 정책 기획·실행·현행 체계의 구축 및 규모 등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장애에

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장애인의 문화 향유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의제에 더해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의 창작, 발표 및 일자리 지원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8조를 근거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고용·소득 현황, 관련 시설·단체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장애예술인 조사 모집단 7095명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34.3%), 지적장애(26%), 시각장애(15.0%), 자폐성 장애(13.0%), 뇌병변장애(4.9%), 청각·언어 장애(4.1%), 기타(2.7%) 순이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는 83.7%,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16.3%, 장애발생 시기는 선천적 장애 54.2%, 후천적 장애 45.8%로 집계됐다.

장애예술인의 주 활동 문화예술분야는 서양음악과 미술이 각각 27.2%, 26.8%를 차지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은 '미술', 시각장애인은 '서양음악'과 '국악',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서양음악'과 '미술' 분야에 주로 활동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문화와 연극'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일자리로 기업이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되, 협약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소속된 문화예술기관이 지속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고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예술인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동호회 또는 재할프프로그램 목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가 일자리로 발전된 경우가 있다.

최근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의 직업적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로서 문화예술이 부각되고 있다.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는 창작물품을 기업에 제출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로 이것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로 장애예술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기역량을 강화시켜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예술인 지원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모델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예술인 고용으로까지 확산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적 재능을 일자리로 연계해 직업인으로서 자립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이에 따른 소득보장이야말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가장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장애인 복지이다. 이 같은 복지정책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화예술분야는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장애인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발굴해 직업재활 훈련과 프로그램으로 재능을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취재수첩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라지길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오죽하면 무도를 배우겠습니까. 갑작스레 폭행을 당하면 몸과 마음이 멍들습니다."

긴급 출동을 했다가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폭력을 피하고자 '호신술'까지 익히게 된 광주소방본부 구급대원의 전언이다.

119 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해야 하는 환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흥기로 위협하려다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소방본부에 45건(광주 26건·전남 19건)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접수돼 정식 수사가 이뤄졌다. 피의자의 대부분은 주취자로 알려졌다. 구급대원

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과 발로 폭행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피의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된 소방법 제50조(벌칙)가 적용된다.

이에 벌금형 25건, 징역유예 9건,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기소유예 등 기타 4건, 실형 2건 등 처벌이 이뤄졌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반복되자 결국 소방당국이 자구 노력에 나서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현재 광주소방본부 구급대원이 배운 '크라브 마가(Krav Maga)' 등은 적극적인 대응 수단이다. 거리 유지와 방어에 위한 것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 강조됐다.

구조대원들이 호신술을 배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다른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구급대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독자투고

로맨스 스캠, 당신이 피해자 될 수도

누구나 살면서 '로맨스'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달콤한 말을 뒤로하고 SNS 활동도가 높아지고 데이터 어플이 증가함에 따라 '로맨스 스캠'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되고 있다.

로맨스 스캠이란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와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 등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과 신뢰를 얻은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연애 빙자 사기'를 말한다.

대부분 '가족이 아프다며 치료비가 필요하다', '잘 되던 사업이 아쉽게 실패할 위기가 급전이 필요하다' 등 가슴 아픈 사연으로 동정심을 유발해 금전을 요구한다.

만일 내가 로맨스 스캠의 피해를 당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내용, 송금내역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경찰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누구나 삶의 고단함과 이성에 대한 외로움으로 인해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SNS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로맨스 스캠의 피해 사례 속지, 낯선 링크 클릭금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요구가 있다면 의심하고 경찰에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등 로맨스 스캠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승민 여수경찰서 분산파출소 경장

사설

전남도 '에너지 분야 3대 시책' 결실 맺길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전남도 미래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앞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들 산업 지원의 기반이 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일명 '에너지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 등 이른바 전남의 '에너지 분야 3대 시책'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남도는 도민 1인당 약 50만원(연간 평균)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기본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이 추진중인 햇빛연금이 대표 사례라고 한다. 실제로 신안군은 지난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 주민 주도로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태양광 발전회사의 수익 30%를 나눠주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거리에 따라 분기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8만원의 햇빛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지급액은 22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발전 허가를 받은 21.8GW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2개 시·군의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이 확산되도록 제도화해 나갈 방침인 것이다. 현재 영광·신안·완도는 이미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영암·해남·진도 등도 추진 중이다.

또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잉여 전력을 전력 다소비 기업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력 자립률이 198%를 넘어선 전남은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345kV급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 정책과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인 것이다.

이와 함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 반도체를 비롯한 데이터 관련 대기업 등 RE100 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계획대로 에너지 3개 시책이 결실을 맺어 인구유입 효과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광주상생카드 지역경제 활력...정부 지원 절실

광주시가 지난 1~2월, 두달간 추진했던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이 소비활동을 이끌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한다.

이 기간 평균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보다 무려 42%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광주시에 따르면 올 1~2월 광주상생카드 발행규모는 1819억 7000만원(1월 1006억6000만원, 2월 813억1000만원)이며, 사용액은 1326억원(1월 672억원, 2월 65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 명절이 있는 1월 발행액 1006억6000만원은 지난해 12월(413억3000만원)보다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또 두달간 평균 사용액 663억원(1월 672억원, 2월 654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467억 4600만원)보다 42%나 늘었다. 다시 말해 평소 7%였던 '광주상생카드' 할인 폭을 '10%'로 3% 늘려보니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다.

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1월에는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2월에는 광주시 단독으로 예산을 투입해 이처럼 10% 특별할인을 시행한 것이다. 3월부터는 다시 7%할인으로 환원된 상태다.

광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는 2019년 3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지역내 자영업체, 전통시장 등 경제조건을 갖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일정부분 즉시 할인되는 이 카드는 매출 10%의 할인율이 적용된 2022년 사용액이 무려 9897억원이나 됐다. 시와 매칭방식이었던 국비지원도 322억원이나 받았다. 하지만 2023년부터 국비지원이 165억원으로 줄면서 광주시는 할인율을 평소 7%, 설과 추석에 포함된 달만 10%로 축소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비 지원은 지난해 136억원으로 더 줄었고 올해는 아예 '0'이 된 상태다. 그래서 인지 사용액도 2023년 9164억원, 2024년 6152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재정 여건 열악으로 부담이 가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 상생카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ju City and various departments like Police, Fire, and Education.